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7.22(금) ~ 2022.7.28(목)

제공일시 2022 08 0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7.22(금) ~ 2022.7.28(목)

제공일시 2022 08 0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기후 대응 정책 패키지 추진 가속화

- 유럽연합이 유럽기후법의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55%(일명 핏포55) 패키지 법안 13개 가운데 8개가 EU의회, 이사회에서 입장을 확정했음
- 의회와 이사회 입장이 모두 확정된 법안은 △유럽 배출권 거래제(ETS)-항공부문 △유럽 배출권 거래제(ETS2)-건물·도로·운송 부문 △회원국 에너지 노력분담 규정 △토지이용 및 변화, 임업 규정 △탄소 국경조정제(CBAM) △사회기후기금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이니셔티브 △승용차 및 소형상용차 CO2 배출 규정 등임
- 이외에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지속가능한 해양 연료 이니셔티브 △에너지조세 지침 △재생에너지 지침 △에너지효율 지침 등 나머지 5개 법안은 아직 개별 기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음
- 핏포55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산업에만 적용하던 배출권을 건물, 도로, 운송, 배와 비행기까지 다 적용하고, 점차 유상할당을 늘려가고, 또 CBAM을 통해 해외수입품에도 탄소무역장벽을 치겠다는 것으로 추정됨

(더구루, 2022.07.24.) 홍성환 기자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39083>

2. 러 “가스공급 축소” 또 에너지 위협… EU “소비 15% 감축” 맞불

-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각) 역내 에너지 공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올해 겨울 자발적으로 천연가스 수요를 15% 줄이는 데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음
- EU의 발표는 러시아가 25일(현지시각) 가스를 기존의 20%만 공급하겠다고 한 선언에 대한 대응으로 확인됨
- 다만 27개 회원국 중 러시아 가스관과 연결되지 않은 아일랜드와 몰타 등에는 15%보다 낮은 규모의 감축 의무가 부과됨 제강산업에 쓰이는 천연가스 또한 예외로 인정됨

(연합뉴스, 2022.07.26.) 김정은 기자
<https://www.yonhapnews.co.kr/news/96202207261300088mpa1219n>
(동아일보, 2022.07.27.) 이채원 기자
<https://www.dongg.com/news/article/44/20220727/114671393/1>

3. EU, 국가 보조금 수혜기업에 대한 규제 발효 눈앞

- EU가 역내 기업 간 공정 경쟁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몇 가지 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제3국의 기업이 자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EU의 기업을 인수하는 건이 잦아지면서, 공정 경쟁의 규칙이 역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 이에 EU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역외 기업이 EU의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중국의 EU역내 시장점유율을 낮추고자 역외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입법을 진행하고 있음
- EU기업과 기업결합 혹은 EU의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중 매출액과 보조금 규모가 일정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철강·알루미늄, 인프라, 조선·항공, 테크놀로지, 에너지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07.27.) 브뤼셀 무역관 박초영
http://kotrakorea.com/news/industry/20220727_10384EU_0-20220727_10-20220727-22020727-22020727-22020727

1. 美 상원 양당 기후대응법 합의… 바이든, 비상사태 선포 여부 주목

-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같은 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합의했음
- 민주당이 이 법안에 줄곧 반대해온 맨친 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며, 좌초 위기에 놓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립니다.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관련 예산으로 3690억 달러(약 481조원)를 책정하고,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3000억 달러(약 400조원)를 쓰는 내용을 골자로 함
-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의 탄소 배출량이 2030년까지 약 40% 감축될 것이란 분석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이 기다려온 소식”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상·하원에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 달라고 촉구했음

(뉴스, 2022.07.28) 김지은 기자
https://newsis.com/view/?id=NSIS02202728_0001959758&cid=10101&pid=10100

2. 미 ‘ESG 공시 인증’ 놓고 회계법인·컨설팅업체 갈등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변화 관련 공시를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에 요구 하면서, 공시 인증 업무를 놓고 회계법인과 컨설팅업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음
- 지난달 빅4 회계법인들(Deloitte, EY, KPMG, PwC)은 SEC에 기업의 ESG 공시 인증 업무를 수행할 자격에 대해 범위를 좁혀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음
- 미국 증권법은 공인회계사들에게만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감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SEC의 기후변화 관련 공시 규정안에 따르면 인증보고서는 외부 감사인은 물론이고 엔지니어링과 컨설팅, 인증 법인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의해 작성될 수 있음
- 실제로 감사품질센터(CAQ)에 따르면 지난해 S&P 500 기업들 중 약 6%가 회계법인을 이용해 ESG 정보 일부를 검증했고, 비회계법인을 이용한 기업은 47% 가량 됨 이에 비회계법인 컨설팅업체에서는 실무적인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내일신문, 2022.07.22) 이경기 기자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30329

3. 美 상원 ‘중국 견제’ 반도체법 금주 처리 전망… ‘칩4 동맹’ 본격화되나

- 미국 상원이 반도체 산업에 총 520억 달러(약 68조원)를 지원하는 법안을 조만간 처리할 전망이다
- 이번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520억 달러 지원과, 기술 연구 강화 지원에 1900억 달러를 승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을 견제하는 반도체 동맹인 ‘칩4’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더해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비우호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새로 짓거나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음
- 법안이 통과하면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됨

(아주경제, 2022.07.25) 권성진 기자
<https://www.ajunews.com/view/20220725094124716>

(조선비즈, 2022.07.25) 채민석 기자
https://biz.chosun.com/industry/semiconductor/2022/07/25/20220725094124716?scorp=main&utm_source=main&utm_medium=main&utm_campaign=main

1. '녹색프리미엄' 자제 권고... 재계, 재생에너지 비용 부담 폭증 우려

- 애플, BMW 등 글로벌 기업이 녹색프리미엄 제도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 나서고 있는 국내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5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주요 기업에 녹색프리미엄 사용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녹색프리미엄은 한국형 전환 수단으로 지난해 도입 당시, 기존 전력에 웃돈을 더해 구매할 뿐이기에, 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일반 전력을 사용 때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에서 재생에너지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음
- 현재 녹색프리미엄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전력구매계약(PPA)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RE100 이행 방식을 고려할 것으로 보임

(데일리인팩트, 2022.07.25) 박민석 기자
<https://www.dailyinpat.co.kr/news/article.html?no=6238>

2. 전력거래소, 네이버 등 포털에 실시간 전력수급 상황 공개

- 전력거래소가 피크시간대에 절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을 활용해 실시간 전력수급 상황 정보공개에 나섰다
- 전력거래소는 기존 홈페이지와 자체 앱을 통해 제공하는 실시간 전력수급 현황 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한다고 함
- 네이버에서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시, '전력' '전력수요' '전력수급' 등 관련어 정보 검색시 실시간 전력수급 현황 정보 제공은 물론 전력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전력예비율과 공급률, 전력통계 정보시스템 등의 정보를 제공함
-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정보' 앱을 통해서도 실시간 전력수급 현황 뿐 아니라 전력시장 가격 정보, REC 현물시장 가격, 시간대별 태양광 추계통계 제공 등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이데일리, 2022.07.25) 강신우 기자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2086632398128&mediaCodeNo=25780&url=03&v>

3. 대기업 총수 관련자에 '사외이사' 빠지나

- 공정거래위원회가 곧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관련 제도 개선안을 내놓음
- 다음 달 1일께 대기업 동일인 관련자 범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임
- 총수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줄이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할 방침도 공개함
- 이에 따라 기업 총수의 특수관계인에서 사외이사를 제외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림

(이데일리, 2022.07.28) 강신우 기자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176632399113&mediaCodeNo=25780&url=03&v>

4. 세척한 플라스틱도 재사용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식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앞으로는 화학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이 아닌 물리적 방법으로 재생된 플라스틱도 재활용 가능해질 예정임
- 개정된 식위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기구·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재생원료 인정절차 마련 ▲'품목제조보고서'에 영양성분 기재 의무화 등임

(대한금식신문, 2022.07.27) 박준재 기자
<http://www.fnews.co.kr/news/article/view.html?no=46072>

1. DOE, 혁신청정차량 기술 위해 9600만 달러 투자

- 최근 DOE(미에너지부)는 미국 내 운송 부문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9600만달러(126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이번 재원은 전기차 충전 접근성 확대, 전기화와 대체연료 청정 비도로 차량 창출, 전기구동 부품 및 소재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전기차 효율성과 경제성 극대화에 나섬
-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성장하는 경제를 지원하고 교통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DOE는 새로운 배출물을 제거하고, 휘발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청정한 이동 옵션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했음
- 이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운전자의 전기차 접근성을 확대하고, 농업과 건설산업에 동력을 공급하는 차량 현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음

(에코미디어, 2022.07.27.) 황원희 기자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96567550949>

2. 글로벌 석유·가스社, 재생에너지기업 M&A ‘눈독’

- 글로벌 석유 기업들이 고(高)유가로 두둑해진 현금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기업 인수합병(M&A)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셸, BP, 토탈에너지 등 석유·가스 대기업이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대형 M&A 계획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라고 27일 보도했음
- 시장에서 석유 기업들이 인수에 관심을 가질 만한 대상으로 덴마크의 최대 해상풍력 기업 오스테드, 독일 RWE 등을 거론함
- 투자은행(IB)업계 일각에서는 석유 기업들이 ‘대어급’ 인수를 추진하기엔 아직 여력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제기됨

(한국경제, 2022.07.28.) 강리만 기자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728046>

3. ‘해양바이오’ 시장 2027년까지 1.2조원 키운다… 해양바이오뱅크로 기업 공동연구 지원

- 정부가 식량·에너지·산업소재·의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쓰이는 바이오소재를 해양생물로부터 얻는 ‘해양바이오’ 산업 시장을 2027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로 키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 이번 전략에는 △해양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순환 산업생태계 조성 △기업의 자율적 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중점과제가 담겼음
- 정부는 바이오소재 연구를 돕기 위해 해양바이오뱅크를 활용하고, 기업과 공동으로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할 계획임

(아시아투데이, 2022.07.28.) 손지민 기자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728010019643>

4. 화석연료 대신 수소… 철강산업 ‘그린 철강’ 속도전

- 세계적 철강사들이 앞다퉈 ‘그린 철강(저탄소 강재)’ 생산 계획을 내놓고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음
- 철강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그린철강 생산 규모가 2025년 320만에서 2030년 2000만으로 빠르게 확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이미 완성차 업체를 포함해 여러 고객 기업들이 그린 철강을 요청하고 있는데, 글로벌 철강사들은 그린 철강 생산에 돌입했거나 구체적 생산 계획을 내놓는 분위기임

(국민일보, 2022.07.28.) 김지애 기자
<http://news.kmb.co.kr/infoc/view.asp?infoc=017932&code=014113&grv>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7.22(금) ~ 2022.7.28(목)

제공일시 2022 08 0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호주 기후정책 법제화에 이어 러시아 가스 의존도 낮추기 위해 정책 추진하는 EU

- 지난 5월 출범한 호주의 새로운 정부가 기후정책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5월 총리 선거 이후 열린 첫 의회 회기에서 처음으로 호주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제출됨. 제안된 법률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3% 감축 및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법안에는 배출량 감축 목표 외에 기후변화 에너지부 장관이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진척상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 독립기후변화청(Climate Change Authority)이 목표 달성에 대한 진척상황을 평가하고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호주의 기후공약을 강화하고 공식화하는 것은 올해 5월 총선에서 승리한 신정부 공약 중 하나임. 스콧 모리슨 전 정부는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도입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입법이나 세금을 활용하지 않았음. 현재 호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G20국가에서 가장 높은 상태임
- 이번 법안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기업 및 투자기관들은 적극 지지함. 어윈 잭슨(Erwin Jackson) 기후변화투자그룹(IGCC) 정책국장은 법안 제출 후 성명에서 "기후변화법안의 의회 제출은 경제 전반에 걸쳐 기후 해법에 대한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함
- 한편, 이 법안에서 호주정부는 또한 기후 목표를 호주 재생 에너지청(ARNA), 청정 에너지 금융청(CEFC), 인프라 호주와 같은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제공하는 정부 기관과 부서의 목표에 삽입할 것을 제안함.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현재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당 정부 외에, 상원에서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함. 애덤 밴트(Adam Bandt) 하원의원이 이끄는 녹색당은 이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새로운 석탄과 가스광산 건설을 반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음
-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EU의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에너지량에 대응하기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스 소비를 15% 줄이기로 합의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합의 직후에 성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가스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함.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에너지 위협을 "또 다른 형태의 테러"라고 비판함
- 독일은 올해 초에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15% 줄여 40% 이하로 내린 바 있는데, 이 조치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독일에 에너지 수급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함. 독일 경제부는 27일(현지시각)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간 130억~140억유로(17조2535억원~18조5807억원)의 건물 보수 보조금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독일은 2045년까지 기후 중립국으로 진입할 목표로 올해 약 96억 유로(12조7410억원)에 달하는 건물 보수공사 지원비를 제공함. 정부는 향후 몇 년 동안 낡은 건물을 보수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창문과 문, 난방기를 설치하기 위해 매년 120억~130억유로(15조9263억원~17조2535억원)를 배정하고, 10억유로(1조3271억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 건물 건설에 배정할 예정임
- 이 프로그램의 자금조달은 주정부 대출기관인 KfW와 중도좌파 집권연대가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난해 승인한 '기후기금'을 통해 이뤄짐. 정부는 이달 초 2024년부터 독일에 새로 설치되는 모든 난방 시스템을 65%의 재생 에너지로 가동하도록 의무화하는 건설업 비상계획을 발표할 바 있음

(임팩트는, 2022.07.27) 홍명표 기자
<https://www.impactnet.net/news/articleView.html?idxno=4616>

(임팩트는, 2022.07.29) 홍명표 기자
<https://www.impactnet.net/news/articleView.html?idxno=4624>

- 2021년 독일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에 비해 4.5% 증가함. 독일은 2030년까지 1990년도 배출량에서 65%를 줄이고자 함. 로버트 하벡(Robert Habeck) 경제부 장관은 성명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독립성과 기후 보호에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기여이며 에너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함